

“버스 기다리다 사고 날라”... 시민 불안감 확산

양동3 재개발 인접 정류소... 낙하물 사고 위험 커 가림막으로는 한계... 당국 “철거 시점 맞춰 이전”

“안전 가설 펜스가 고층 낙하물을 온전히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버스정류소에 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광주 도심 버스정류소가 재개발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으면서 시민들의 안전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역 버스정류소(남·북, 돌고개역 방향). 이곳은 송정19번, 첨대30번, 금호36번, 금남59번, 나주160번 등 17개 노선이 지나가는 주요 정류소로, 양동시장과 지하철 1호선이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문제는 정류소 바로 뒤편에서 재개발 공사를 앞둔 현장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양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월부터 공사 전 안전조치로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양동 350번지 일원 5만5000여㎡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13개 동, 1212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재개발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 서구 양동시장역 근처 버스정류소 주변 모습.

건설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양동 350번지 일원 5만5000여㎡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13개 동, 1212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안전시설이 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낮다. 공사장과 정류소가 사실상 맞닿아 있어 낙하물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고 기억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2월 동구 지산동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이 붕괴돼 작업자가 다쳤고, 2021년 6월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씨(60)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전해가 될까 걱정된다”며 “시장 인근이라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정류소를 미리 옮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은 인근 정류소에서도 확인된다.

광주YMCA·광주고용센터(금남로 방향), 양동시장 교차로(광주역 방향) 정류소 역시 공사 현장과 가까우나, 얇은 가림막과 쇠파이프 설치 외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원장은 “공사장과 대중교통 시설이 과

도하게 인접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가림막은 먼지·소음 차단 수준일 뿐 붕괴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반경 밖으로 정류소를 임시 이전하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공사 일정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지구 관계자는 “현재 본격 공사 단계가 아니며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철거 시점이 확정되면 광주시와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임시 정류소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 보이스피싱 신고 ‘벌금형’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피해자였지만, 제도적 구제 절차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 단독 전회속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4월 중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고, 특정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사이트에 보낸 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병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범법인과 ‘환불 협의 대행’ 계약까지 체결한 뒤, 안내에 따라 허위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운영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이나 피해금을 받아 내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사기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식 수사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도로변 잡목 가지치기 1일 나주 노안면 한 도로변에서 나주시청 건설과 직원들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잡목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GIST 노사 교섭 난항... 쟁의행위 92% 찬성

3개 노조 참여... 157개 조항 일괄수용 촉구 대학 “정부 지침 어긋나·과도한 혜택 요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노사 간 단체 교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실제 쟁의행위에 나설 지 주목된다.

GIST 3개 노조는 1일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92.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144명 중 13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126명이 찬성했다.

투표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GIST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GIST지부, GIST 연구원 유니온이 참여했

으며, 노조는 공동 대응 방침을 세웠다.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 157개 조항 가운데 60개 사측외 64개 수정안을 제시하며 노동조건과 노조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안정과 복지 수준 저하, 노조 활동 위축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GIST는 사측이 아닌 수용이 어려운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조항은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타 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측 의견을 낸 60개 조항 일부는 인사위원회 참여 등 노조정합부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IST는 재논의 가능성과 함께 교섭 재개 의지를 밝혔으나, 노조가 원안 수용을 요구하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4년 이후 지속해 교섭을 벌여왔으나 노조는 단체협약의 일괄수용을, 사측은 항목별 검토 및 조정을 전제로 한 협상을 제안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최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 고려인 법률상담 1위 ‘임금체불’

증빙 자료 확보 어려움 호소 YMCA법률지원단 1분기 분석

고려인 동포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진행된 법률상담 총 22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증거 수집 제정당 등) 4건, 부동산·사고·민사 각 2건, 회사갈 등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분야는 보증금 반환 지연,

누수 하자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고 분야는 자녀 교통사고 피해 보상과 자녀 개물림 사고처리, 민사는 개인 간 대여금 반환에 대한 문제였다.

대다수 고려인 동포는 상담받을 때마다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어려움’을 호소했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상담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증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대리기사 안 와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

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